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04
----------	------

발의년월일 : 2021. 01. 15

발의의원 : 배지숙 의원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이만규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수준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중요한 시정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화재, 범죄, 폭서·폭한, 위생문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아동 주거지원제도는 더욱 절실함.

따라서, 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과 주거복지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주거정책과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용어를 관계 법령과 입법취지 등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운영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과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이하 “아동 주거지원 등” 이라 함)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 조사의 실시 및 전문기관 의뢰의 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계획의 내용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4조)
- 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지원, 주택의 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시설중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비 지원사업과 긴급 지원사업,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전문성있는 사업의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안 제5조)
- 라.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요한 ‘아

동 주거기준' 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시장이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본계획, 주거지원사업, 아동 주거기준 등의 아동 주거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현재의 주거정책의 행정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민간단체와의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주거기본법」, 「아동복지법」,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취약 아동을 비롯한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수준의 주거시설 공급 등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주거취약 아동”이란 아동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지하층, 옥탑,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이하 “아동 주거지원 등”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등은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아동 주거지원 등에 대한 시책에 대해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 및 주거지원 사업

제4조(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주택 등 주거복지 수요분석
3.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택지원계획
4.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5.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업에 관한 계획
6.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자원 조달·운용계획
7. 그 밖에 아동 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이하 “주거기본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주거지원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거취약 아동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기, 상세한 내용, 방법 등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아동 주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2. 주거취약 아동 가구의 주택 수리 또는 수선, 증·개축 등 주거시설 개선 지원사업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긴급지원 숙박비용 등 주거비 지원 사업
4. 주거취약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사업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주거취약 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요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비롯한 관련 시책의 추진에 있어 제1항에 따라 정한 아동 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기준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다.

제3장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아동복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아동복지, 주거복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기본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거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당,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아동 주거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행, 제6조의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주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3. 생략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 11. 생략

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